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다음달 본격 착수

추진상황 보고회...상무관 앞 지하사가 출입구 철거해 평지로

5월 관련 6개 건물 전면 복원...1월에 용역 발주 2021년 완공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과 맞물려 80년 광주항쟁 희생자들의 시신 안치 장소인 상무관 출입에 장애가 됐던 금남로 지하사가 출입구가 철거돼 평지로 조성된다. 옛 전남도청 사업은 내년 1월께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오는 2021년 완공된다.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협의회)는 20일 옛 전남도청 민원실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옛 전남도청복원 범시민대책위,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 광주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단체는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방침을 정함에 따라 내년 사업비 30억원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의 명칭은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이지만 사실상 문화전당에 포함된 5월 관련 6개 건물 전체에 대한 전면 복원이다.

협의회는 옛 전남도청을 오는 2021년까지 복원하기로 뜻을 모으고 복원의 청사진이 될 기본계획 용역을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추진한다.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 설계안과 5·18 당시 상황을 재현할 전시 콘텐츠 설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 예산으로는 모두 6억원이 투입된다.

복원 범위에는 현재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민평)에 포함된 6개 건물이 모두 포함됐다. 옛 전남도청 본관·민원실·별관, 경찰청 본관·민원실, 상무관 등이다. 이들 공간은 문화전당 축이 5월을 형성화한 작품 등을 전시하기 위해 이미 개·보수를 단행한 5월 관련 유적이다.

협의회는 80년 당시에 근접한 원형복원을 위해 사진, 영상, 기록 등을 시민들에게 기증 및 제보받아 활용한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첫 사업으로는 24억원을 들여 상무관 접근성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상무관은 5월 희생자들이 임시 안치됐던 공간이지만 금남로 지하사가 출입구와 맞닿아 있어 출입에 장애가 됐다. 사업은 내년 1월께 발주돼 오는 2019년 완료로 목표로 추진된다.

이미 문화전당 축에서 설치·가설한 상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상황 보고회가 20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당수 시설이 철거된다. 옛 전남도청과 본관 사이에 설치된 문화전당 방문자센터, 옛 전남경찰청 본관 외벽에 설치된 LED 펜스 등이다.

협의회는 80년 당시에 근접한 원형복원을 위해 사진, 영상, 기록 등을 시민들에게 기증 및 제보받아 활용한다.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첫 사업으로는 24억원을 들여 상무관 접근성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상무관은 5월 희생자들이 임시 안치됐던 공간이지만 금남로 지하사가 출입구와 맞닿아 있어 출입에 장애가 됐다. 사업은 내년 1월께 발주돼 오는 2019년 완료로 목표로 추진된다.

협의회는 상무관 접근성 개선사업, '오월의 문' 조성 등은 가급적 오는 2020년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이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각에서는 협의회가 광주 지역민들의 공통 관심사인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폐쇄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협의회가 마련한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운영규정(안·제7조)'에 '언론보도 및 홍보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막가파' 중국어선 경비함 향해 돌진 해경, 실탄 250발 발사 44척 퇴치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박에 쇠창살과 철망을 두른 중국 선단이 여전히 우리 바다의 어족자원을 노리고 있다. 이들은 해경 경비함을 충돌 직전까지 몰아붙이다 사격을 받고 퇴각하는 위험한 행태를 일삼고 있다.

2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40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100km(어업협정선 내측 1.85km) 해상에서 60~80톤급 중국어선 44척이 해경의 단속에 저항하다 실탄 사격을 받고 달아났다.

서해해경이 단속 중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단속에 나섰던 목포해경 소속 1508경비함(1500t급)은 이날 새벽 0시30분께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한 중국 어선을 발견, 퇴거 경고 방송을 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경비함을 들이받으려는 듯 돌진했다.

이에 1508경비함 소속 경찰들은 3009함·1010함(목포해경 소속), 3013함(군산해경 소속)에게 지원 요청하고 오전 9시15분부터 9차례에 걸쳐 공용화기 M-

60(180발)과 개인화기 K-2(21발), 비살상 무기인 12계이지(스핀지탄 48발) 등 총 250발을 중국어선을 향해 쏘았다.

사격을 받은 중국 어선들은 오후 2시 40분께 뱃머리를 돌려 어업협정선 밖으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인천 인근 해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돌로 침몰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해양경비법에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용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당시 중국 어선들이 해상 파고가 4m로 높아 해경의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불법 조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거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찰관과 중국 선원은 없었으며, 중국어선측의 정확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해해경은 이날 4일과 지난 2월 함·1010함(목포해경 소속), 3013함(군산해경 소속)에게 지원 요청하고 오전 9시15분부터 9차례에 걸쳐 공용화기 M-

·목포=김병민기자 dss6116@

신생아 집단 사망 원인

의료과실·감염에 무게

이대목동병원서 숨진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이 의료과실 또는 병원감염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숨진 3명의 신생아 혈액에서 검출된 항생제 내성균이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하나의 감염원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감염원으로 가장 큰 의심을 받는 게 세균에 오염된 수액이다. 수액은 모든 미숙아의 영양공급에 필수다. 이런 수액에 항생제 내성균인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감염됐고, 이게 동시에 사망 신생아한테 공급됐다

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감염내과 전문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연합뉴스

미용실서 50대 분신 기도

20일 오전 10시25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미용실 안에서 고모(53)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분신했다. 고씨는 미용실 주인과 함께 스스로 불을 끈 뒤 출동한 119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다.

고씨는 양팔과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용실 주인은 "손님으로 온 고씨가 갑자기 '그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사과 해라'고 소리 지른 뒤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미용실 주인과 고씨는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검찰,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 강용주씨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전남대 의대 재학 중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간 옥살이를 했던 강용주(55·의사)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 대해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강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행정 처분에 따라 신고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까지 7차례 처분이 갱신됐다"면서 "14년간 갇혀 있던 1평도 안 되는 창살 있는 독방에서 벗어났지만 18년째 여전히 보안관찰법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또 "보안관찰법은 사회적으로나 윤리적

으로 폐지된 법률이다. 꿈을 꾸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1985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으로 1999년 2월 석방됐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불리는 그는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그는 보안관찰법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신고 의무를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기소돼 2002년과 2010년에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다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내년 2월 7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우병우 뒷조사 피해 장휘국 교육감 참고인 조사

"이해하기 어려운 고발 여러 건 있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고발 사건도 여러 건 있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불법 사찰한 정보가 있는 진보 성향 교육감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장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불법사찰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청사에 도착한 장 교육감은 "광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보수단체나 보

수적 학부모단체들, 서울 지역의 어머니 연합, 군 관련 단체 등이 와서 집회·시위나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부에서 부교육감에게 '교육감을 견제하지 못하면 동조하면 좋지 않은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황홍규 부교육감을 3개월간 고위과정 강제 연수를 시켰다"며 "미행이나 개인 사찰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관용차 운전자가 몇 차례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5일 우 전 수석을 구속한 데 이어 불법사찰 의혹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NPL과 특수물건만이 정답이다!!

부동산 투자 !!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선규 H.P 010-3605-5000